野 "尹, 日 극우 세력 논리로 일본 대변"

'무릎 꿇어라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WP 인터뷰 관련 "원문, 주어 안빠져 與 거짓말 더 망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대일굴욕대책위원회 ·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중 일본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보다 일본 입장을 중시하는 망언을 들어야 하나"라는 등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일굴욕대책위원회, 국회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WP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일본 극우세력 논리로 일본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발언은 앞으로도 절대 한국에 무릎 꿇지 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며 "국민 생각 따위는 개의치 않겠단 불통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자학적 역사 인식"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4일 WP가 공개한 윤 대통령 인터뷰 중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발언에 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영어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WP 기자는 트위터에 녹음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WP 기자가 원문 그대로 보여주면서 주어가 빠지지 않았고,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공개한다면서 내용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더 망신을 당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 보겠다고 거짓말해 대통령을 더 망신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번 바이든, 날리면 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다녀와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도 즉각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도록 말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엉터리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이 틀렸다는 게 WP를 통해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 여당도 윤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말을 했단 걸 간접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 인터뷰는 대통령실에서 녹음을 다 한다"며 "더 이상 해명할 게 있다면 자기들이 녹음해 놓은 것 중 그 부분을 풀어 온 국민에게 들려주면 된다"고 더했다.

또 "마치 윤 대통령 결단이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같은 반열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당시 합의문엔 분명히 과거를 직시한단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후 아베 정권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 과거사에 대해 더 이상 사죄할 게 없다고 했다"면서 "다시 말해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은 아베 정권 때 이미 파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야권 의원들은 "대통령의 안보 발언 리스크 때문에 왜 국민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나"라며 "일본에 퍼줄대로 퍼주고 돌아온 건 한층 거세진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 대신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 외교청서에서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짚었다.

아울러 "우린 이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도 복원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우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양보한 결과가 고작 이건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승적 결단 운운하며 우리가 먼저 양보하면 일본의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 단언하던 결기는 어디 가고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뺨 맞고 뒤통수를 맞아도 여전히 일본 선의를 기대하고 있는 무능한 대통령은 허울뿐인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집착을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강제동원 해법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야당 대표를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며 집권 1년이 지나도록 5분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누굴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단 건가"라고도 했다.

이들은 "사죄, 반성 생각이 없는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로는 한일 관계 미래와 정상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나아가 "대일 외교 기조를 즉각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좋아하는 일본 극우 세력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야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김건희 · 대장동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 · 정의,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서 올리기로 박홍근 "여당과 정부 · 여당 변화의 지렛대 역할 기대" 이은주 "양당,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 합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검법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50억 대장동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정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왔지만 오늘 아침 상당히 유감스런 발언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이은주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18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안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발의했는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 두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의 동의 의원 등의 날인을 거쳐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전환

전날 파리서 귀국 "조사해달라" 공여 혐의자 조사 후 소환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의심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수십명에게 정치자금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 · 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송 전 대표는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윤 · 이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이 사건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돈봉투 살포의 윗선을 송 전 대표로 보고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당초 오는 7월까지 파리경영대학원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의혹이 확산하자 전날 조기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전인 지난 22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협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보고, 기존 스케줄대로 수사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협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 등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 사이 송 전 대표를 불러 돈봉투 살포 정황을 인지 또는 지시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도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체계화

한정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북도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됐기 때문이다.

한정수 의원은 "장애인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여러가지 요소 중 사회적 인식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담고있는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 · 시행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식 실태조사 의무 등과 같다.

한정수 의원은 "이미 17개 시 · 도중 13곳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북의 조례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정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실태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 위해 익산시 · 시의회 특위 설치 제안"

민주 김수흥 의원, 시민대토론회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의 익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제2혁신도시와 익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익산이 처한 현실과 강점을 소개하며 제2혁신도시의 제도화, K-푸드 산업화와의 연계 전략,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익산이 가진 특장점을 부각해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연계방안까지 염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도 차원의 지원과 의지,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교통망,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익산이 제2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기회를 잡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익산과 같은 중견도시가 발전과 혁신 거점이 되고 청년과 인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익산시의 강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행정적인 과제가 익산시에 있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익산이 주변도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거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익산시민 전체의 단합과 노력, 구도심 활성화,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김수흥 의원은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에는 익산시민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美 최대노조, 국빈방문 尹 향해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이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미국노총은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를 한미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

미국노총은 미국의 노동조합 연맹체로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의 공유 가치와 인권 존중을 표명한다지만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정부 당국의 노조간부 체포를 비롯한 탄압은 한국에서 이미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노조결성권의 온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들의 공동행보를 주도하거나 무역파트너로서 우호적인 조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 및 노조간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